



조장 : 김수현

조원 : 배수진 . 서정화 . 성연정 . 송민진
윤보경 . 이영수 . 조영동 . 하은영

목 차

1. 간도
 - 1) ‘간도’ 란?
 - 2) 간도의 지리적 위치
 - 3) 간도의 문화
 - 4) 청과의 영유권 갈등
2. 일제의 간도 정책
 - 1) 「조선간도경영안」 분석
 - 2) 일제의 침략성의 분석
 - 3) 일제의 간도 영유권 인식
 - 4) 통감부의 간도 정책
3. 러시아의 간도 인식
 - 1) 러시아의 간도 인식
 - 2) 러시아 학자의 간도 주장
4. 대한민국의 활동
 - 1) 간도를 바라보는 인식
 - 2) 민간차원에서의 활동
5. 참고자료

1. 간도

1) ‘간도’란?

간도라는 지명은 병자호란 뒤에 청나라 측이 이 지역을 봉금지역(封禁地域 : 이주 금지의 무인공간지대)으로 정하고 청국 인이나 조선인 모두의 입주를 불허하는 공간 지대로 삼은 뒤,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놓인 섬(島)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 지역을 새로 개간한 땅이라는 뜻에서 ‘간도(墾島)’라고 적었으며, 또 조선의 정북(正北)과 정동(正東)사이에 위치한 방향인 간방(艮方)에 있는 땅이라 하여 ‘간도(艮島)’라고도 적었다.

2) 간도의 지리적 위치

간도는 서간도와 북간도로 구분된다. 서간도는 압록강과 송화강(松花江)의 상류 지방인 장백산일대(長白山一帶)를 가리키며, 북간도는



동간도라고 하며 훈춘(琿春)·왕청(汪淸)·연길(延吉)·화룡(和龍)의 네 현(縣)으로 나누어져 있는 두만강 북부의 만주 땅을 말하는데, 보통 간도라고 하면 동간도를 말한다.

즉, 간도는 노야령 산맥(老爺嶺山脈)과 흑산령 산맥(黑山嶺山脈) 사이의 일대 분지와 혼동강(混同江)과 목단령 산맥(牡丹嶺山脈) 사이의 분지를 아우르는 지명이다.

지역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10월 중순부터 5월 초순에 걸쳐 강설과 결빙이 계속된다. 주민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한편, 임업이 성하며 연길시(延吉市)에서는 훈춘재(琿春材)·간도재(間島材)로 불리는 목재를 산출한다.

연길 분지는 한민족이 최초로 벼를 이식한 곳으로 수도작(水稻作)이 행해지며, 그밖에 콩·수수·옥수수·보리 등도 재배된다. 광물 자원으로 석탄·유모혈암(油母頁岩)·구리·납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용정(龍井)에는 제강, 노두구(老頭溝)·화룡에는 탄광, 천보산(天寶山)에는 구

리·납 등이 산출된다.

3) 간도의 문화

- ① 간도에서는 좁쌀, 수수, 옥수수, 콩, 팥, 보리, 밀 등을 재배한다.
- ② 간도에서는 말,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사육하며 생활한다.
- ③ 간도에서는 자급자족의 형태로 생활한다.
- ④ 간도는 물자가 풍부해 생활상황이 한국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 ⑤ 간도에서는 청국인을 ‘대국인’으로, 조선인을 ‘소국인’으로 부르며 계급적인 차별을 두고 있다.
- ⑥ 현재 ‘좁쌀’은 간도의 유일한 수출품이다.

4) 청과의 영유권 갈등

조선 숙종 때 청에서 ‘목극등’이라는 사신과 조선에서는 ‘박권’이라는 사신을 보내 간도의 영토에 대해 합의를 보는데 종이에 한 것이 아니라 비석에 깊이 새겨 백두산 중턱에 비석을 새웠다.

백두산정계비에 따르면 ‘서위압록 동위토문’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에서는 ‘토문강’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며 조선인

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중국에서는 ‘두만’ → ‘도만’ → ‘토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후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간도협약’이 맺어지면서, 완전히 ‘간도’를 청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이는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 때문이다.

‘을사늑약’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조약이다. 이 때 간도협약에서 일제는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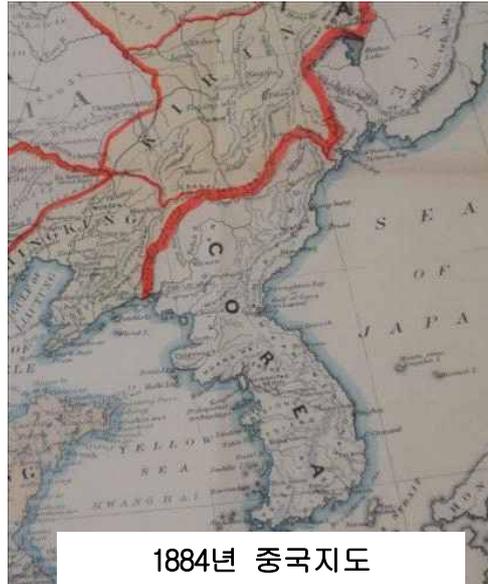


백두산정계비

그러나 을사늑약에는 고종황제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 당시 ‘을사5적’ 이라고 이완용,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권중형의 직인만 있어서 황제의 허락이 없는 조약이기 때문에 ‘간도협약’ 도 무효이다.

또 간도를 조선영토라고 표시한 1884년 중국의 지도가 발견되었다. 이 지도 외에도 675여점에 이르는 옛날 지도에 간도가 조선영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중국지도는 당시 조선과 중국 국경선을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에다가 붉은 선으로 표시했다.



1884년 중국지도

2. 일제의 간도 정책

1) 「조선간도경영안」 분석

‘조선간도경영안’은 내용상으로 일제의 간도 정치 의도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 ‘조선간도경영안’의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선간도경영안’의 작성 시기를 분석해보면 본문에 ‘러일 전쟁’의 기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간도경영안’은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종료된 러일전쟁 직후의 일로 해석되어진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 중에 한국통감부가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함으로써 일어난 청일 양국의 지방관헌과의 충돌이나, 중앙정부간의 외교 분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조선간도경영안’에 기록된 내용은 1908년은 아닌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본문에 “경흥의 대안 청국 령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러시아군은 1907년 4월 13일에 완전히 철수하기로 ‘만주에 관한 중일 조약’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청국 령에 러시아군이 주둔하였다.”고 하는 말은 1907년 4월 이전에 되므로 조사한 연도가 1906년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간도에 대한 이권부식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일본)는 그 조약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권능과 조약상의 권리에 의거하여 대대적으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통해 러일전쟁의 종결로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외무대신 고무라 쥬타로가 조약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청국에 대해 만주를 둘러싼 조약체결을 위해 북경에 갔을 때 간도문제를 다루려고 하다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후일 간도문제에 관한 청일간이 조약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1905년 12월 20일 ‘청일 만주에 관한 협약’ 이 체결되었을 때이므로 1906년 당시 일본은 간도에 관한 조약체결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서간도, 북간도 60만 명의 한인이 일본정부에 의해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면 신속히 간도문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권 부식조약을 체결해야한다. 만일 이를 하루라도 등한시한다면 일본정부가 스스로 ‘일한 신 조약’ 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다. 1905년 11월 17일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수용하는 조약을 강제했다. 여기서 말하는 ‘한일 신 조약’ 은 바로 일명 말하는 ‘을사늑약’ 일본식 명칭인 ‘을사보호조약’ 을 두고 말하는 것이므로 ‘조선간도경영안’ 이 1905년 11월 17일 직후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인들은 일본의 고마움이 “감명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속에는 간도문제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사단 일행을 의심한 나머지…….”, “현재 함경북도에 있는 우리(일본) 측량반은 앞으로 간도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때에는 청국관리가 청국인민에게 명해서 숙사와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간도문제의 해결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일본인들이 간도를 정탐하는 것은 결국은 간도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청국관리를 비롯해서 청국 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려고 청국에 암시한 것은 러일전쟁 중이고, 본격적으로 간도문제에 개입한 것은 러일전쟁 직후부터이다. 따라서 조선간도경영안의 내용은 1906년 4월-5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한 양국은 강희제 51년 조선 숙종39년에 백두산에 경계비를 세웠는데, 그때 두만강 이북에 한국의 영토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한국은 주장하고 있다. 즉 이것이 유명한 간도문제이다. 지금 일본은 ‘일한 신 조약’ (을사늑약)에 의거하여 한국을 대신해서 한국외교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을 위해 청국과 교섭하여 간도영토를 회복해야했다.” 라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언급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제한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에 체결되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조선간도경영안’ 은 1906년 4월 24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간도경영안’이 1906년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 논증되었으니, 작성주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여행주체가 경성에서 출발하여 경성에 다시 도착한 것으로 보아 경성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는 ‘10일 종성 일본수비대 숙박…….’ 등으로 보아 조선주차일본군사령부와 관련이 있고, 청국 군과도 간접적인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일-5일 회령 구 탁지 고문지부 숙박’ 했다는 사실은 조선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외무성이 의뢰했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통감부 또는 주차일본군사령부에 의한 조사가 될 것이다. 또한 “소생도 또 동아동문회원이라고 해서 동문회 목적이…….”를 통해 동아동문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차사령부는 1906년 1월부터 간도 실지조사를 끝내고 돌아온 대륙낭인 나카이 킨조를 통감부 촉탁으로 기용하여 간도문제를 조사하게 하였다. 나카이는 실지조사를 토대로 하여 1906년 3월 한국주차군 참모본부 조사의 ‘간도에 관한 조사개요’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서는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나카이가 이전에 이토황실대사와 하세가와 대장에게 제출한 간도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나카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조선간도경영안’의 작성목적은 알아보면, 작성목적과 가장 관련성이 있는 부분인 ‘간도에서 이권 부식’을 살펴보면, 간도는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일본의 이권을 부식하는 외교적 자료로 활용하여 간도영유권을 중국에 양보하는 대신에 외교적 담판으로 일본의 이권을 요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청국의 영토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2의 러일전쟁을 각오해야하고 러일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간도지방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침략의 요충지인 길림 영고 탐을 점령해야하며, 최종적으로 만주를 장악해야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리고 “간도는 전략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임과 동시에 통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간도문제를 이용하여 이권부식 조약을 체결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즉, 간도문제를 이용하여 청국에 대해 간도지역의 이권을 부식하는 조약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작성목적은 ‘조선과 간도의 경영안’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과 간도를 경영하겠다는 것이고, 간도에 있어서 일본의 이권을 부식하겠다는 것이다.

2) 침략성의 분석

‘조선간도경영안’을 분석해보면 ‘청·한 경계의 쟁의’라는 장을 설정하여 간도 영유권문제의 본질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간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간도가 조선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논증이 될 수 없다. 먼저 ‘토문강’이라는 명칭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고지도에서 ‘토문강’이라는 명칭으로 그 존재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류하는 강은 송화강, 속평강 뿐이라고 하지만 ‘토문강’은 정계비 쪽에서 동류하다가 북류하여 송화강으로 연결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로는 청국이 불리하게 국경을 결정하지 않으려고 토문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당시 청국은 백두산 일대의 지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토문강’의 존재를 두만강의 상류로 오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청’이라고 글자를 비문에 새기고 있는 것은 청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조선의 입장을 전적으로 무시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선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논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간도에 대한 이권부식조약의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간도를 청국영토로 인정하는 대가로 간도지역에 일본의 이권을 부식한다는 내용이다. 즉 조선의 유성, 무산, 회령, 종성, 청진을 개발함과 동시에 청진항을 개항하여 청국영토가 되는 간도의 돈하와 무학 사이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간도지역에는 일본어학교, 일본병원, 불교사원, 제일은행지점, 농사시험장, 원예시험장, 묘목 원을 만들어 문화적으로 일본에 동화시켜 장래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임시방편으로 간도지역을 청국영토로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만주에 대한 영토 정책으로 간도가 다시 일본영토에 편입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이후 일본제국이 만주를 건국하여 간도를 만주국에 포함시킨 것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청국과 조선 사이에 간도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당초 간도거주한민 문제에서 발단된 것이다. 1881년 청국이 거주한민에 대해 청국귀화 또는 조선으로 퇴거를 명하였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생긴 문제이다.

다음으로 ‘조선간도경영안’에서는 한인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무를 운운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기회로 이용하여 조선인을 보호하는 보상으로 그들을 일본화 하는 목적을 가짐으로써 일본인이 보호하려고 한다. 이미 간도의 청한 인을 속국 민으로 간주하고 또 간도 한민을 일본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간도는 온전한 신일본이 되는 것이다. 일본이 ‘간도한민 보호’라고 하는 말은 간도한민의 일본화와 더불어 간도 청국 인에 대해서도 일본에 동화하여 간

도지역을 신일본으로 개척한다는 것이다.

‘조선간도경영안’에서 간도한민에 대한 조치에 관해 살펴보면 간도지역 4곳에 일본영사를 두어 통감이 직접 관리한다. 영사관에 한인의 호적대장을 두고, 귀화한인의 등록을 장려한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사관이 한인의 민사, 형사 소송을 재판하고, 경찰 업무로서는 영사관내에 감옥을 설치하고, 영사관 내에 본서를 두고 영사가 직접 지휘한다. 한인의 자체제도를 개선하여 통감부의 통제 하에 둔다. 영사관은 일본의 소학교를 설치하여 한인에게 일본화 교육을 시키고, 저축을 강요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달력은 일본력을 따르도록 하고 한복의 착용을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사당을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고 집집마다 일본국기와 한국국기를 구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간도한민을 보호하라는 명목으로 일본화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한인에게 개방지에 토지와 가옥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한인과 청국 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 마련된 간도재주한민 보호 장치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리고 국경지대의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러·한 양국의 국경지대에 있는 조선인들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친러, 반일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조선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연해주에 건너가고 있으며, 일본인 포주와 접대부가 러시아에 밀행하고 있고, 경흥을 개항장처럼 사용하여 한우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조치를 내렸는데 경흥대안의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고, 청진항을 유일한 러시아주재 한민은 블라디보스토크 일본무역 사무관이 관리함과 동시에 한인과 일본인의 러시아령 출입과 수출품, 그리고 재러시아한민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한국과 청국 사이에 영유권을 둘러싼 간도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러일전쟁 중에는 한중간의 간도문제 교섭을 간섭하여 일본의 중재로 전후에 해결 되어야 한다고 한중 양국에 경고했다. 통감부는 간도 현지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청국의 간도 현지에서 청일양국의 관헌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한편으로 양국 정부는 간도문제 해결을 위한 영토문제를 협상했다. 결국 일본은 최종적으로 간도영유권을 청국에 양보하고 그 대신에 일본의 이권을 확보하는 조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1909년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이다. 1906년 ‘조선간도경영안’과 ‘간도에 관한 일청 협약’을 비교해보면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간도경영안’에는 한민을 단속하여 일본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간도 협약’에서는 한민 보호에 관한 내용은 전적으로 청국에 양보하고 그 대

신에 일본의 이권만 확보하고 있다. 여기서 일본의 이권부식에 관해서는 연관성과 공통성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한인보호에 관해서는 전혀 공통성과 관련성을 찾아 볼 수는 없다. 결국 일본의 간도정책은 한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허울에 불과하고, 장래 일본의 만주침략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제의 간도 영유권 인식

간도지역은 17세기 조·청간의 합의에 의해 공광무인지가 만들어 진 후 국경지대로서 역할을 해 왔고, 그 후 민족적 이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1860~70년대부터 함경도 거주한인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어 19세기 말 이 지역에는 8할의 주민이 한인으로서 2할 정도가 청국 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1881년 중국정부가 돌연 간도지역을 전적으로 중국영토를 간주하고 한인에 대한 중국국적 귀화 또는 본국 쇄환을 조선 조정 에 요구함으로써 한중간의 영토분쟁이 표면화 되었다. 1885년의 을유 감계담판, 1887년의 정해감계담판, 1904년 선후장정 등 3번에 걸쳐 양국정부간에 국경협상이 이루어졌다. 결국 양국은 최종적으로 국경선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이 러일전쟁을 계기로 만주 등 대륙침략을 본격화 하면서 간도지역을 만주침략의 전초기지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간도의 영토화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정부는 1906년 통감부가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한인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한 ‘간도영토화정책’을 승인했다. 통감부는 청국 몰래 은밀한 방법으로 1907년 8월 21일 간도현지에 파출소요원을 파견했다. 이를 시작으로 종래 한중간의 간도 문제가 일중간의 외교현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4) 통감부의 간도 정책

① 나카이의 간도 조사의 목적

나카이는 당시 조선 경선에서 일본이 간도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일진회의 부통령 윤갑병씨가 전후(러일전쟁) 간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대장이 회령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진정서를 들고 회령에 와서 간도가 조선에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도 그 말에 감동하여 엄청난 간도 회복론자가 되었다. 러일강화조약 이후 간도문제가 일제 통감부를 중심으로 한 관민사회에서 간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영토라는 인식은 결여되어 있었다. 간도영토화 정책을 주장한 것은 역사적 권원을 바탕으로 간도 영유권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카이는 이번 간도탐험의 의도에 대해 “간도 여행의 목적은 간도의 지식을 얻는 것, 영유권문제를 연구하는 것, 액목새의 길을 찾는 것이

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러일전쟁의 군사적 요새였던 액목 새에서 간도에 가는 길을 찾고, 간도사정과 간도문제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간도의 영유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나카이는 “무산간도 만은 산악이 중첩되어 사람이 그다지 살지 않고 특별히 탐험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접근할 위험도)가 작은 지역이라서 조금이라도 탐험해보려고 했다. 회령에 체재했던 10일간 서북의 2리 반 지점에 있는 백토동이라는 곳에 노상에 나와 있는 석탄을 보러갔다.” 고 하는 것으로 봐도, 나카이의 간도조사는 영유권문제보다는 석탄채굴 등 경제적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나카이의 간도조사에 대한 일본정부 관계자의 태도

조선주차군사령부는 일진회 부통령의 간도영유권 회복요청을 받고 간도영유권회복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에, “경성에 돌아가서도 그 사실을 도쿄에 체재 중이던 이토 히로부미 대사에게 전했고, 이토대사는 바로 북경에서 담판을 준비하는 고무라 쥬타로 대사에게 전보했지만,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청조약의 담판에는 간도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었다.” 는 것이다. 우선 주차군사령부는 일본관계자 중에서 맨 처음 간도문제를 알게 되었고, 가장 관심을 갖고 간도정책을 선동한 주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 이후 러일강화조약 실천의 일환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이토대사가 1905년 11월 17일 한국 외교권을 강제했고, 청국에 대해서는 고무라가 조약체결을 의도했는데, 그때 도쿄에 체재 중이던 이토가 고무라에게 한국의 외교권 장악을 명분으로 간도영유권 주장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진회 부통령 윤갑병이 전달한 진정서는 “모한인의 담” 이라는 제목으로 간도가 조선영토라는 근거를 담고 있다. 나카이는 러일전쟁이후 러일 양국의 합의에 의해 7월 14일까지 간도지역에 러시아군이 주둔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간도탐험은 전적으로 밀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당국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간도조사를 앞두고 주중공사, 외무성군부, 통가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간도탐험-필자)을 허가 받기 위해 1월 하순에 출발하여 도쿄에 가서 당시기청국의 전권공사로 간 하야시 콘스케를 면회하여 먼저 승인을 받았고, 다음은 야마자와 정무국장을 방문하여 외무성의 허가를 얻었다. 경성에서는 먼저 하세가와 대장에게 말했더니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고, 이번에 새로 내한 한 이토 통감에게 말했더니 좋다고 동의하면서도 면담이나 훈시도 하지 않고 반대도 찬성도 아닌 적

당히 대답했지만 여기서 간도탐험을 결심했다고 한다. 나카이가 “제2회 간도탐험에서 돌아와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숙소에서 츠루하라 민정자관을 만났다. 민정장관은 드디어 간도를 취하게 되어서 내년(1907년) 4월 13일 통감부의 출장소를 간도에 설치하고 외교담당으로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만일 청국이 이 분쟁을 헤이그평화재판소에 위탁한다고 하면 일본은 반드시 낭패를 볼 것이다. 나카이의 철도론은 이제 끝이 났구나, 나의 간도문제에 대한 발언권도 잃게 되었고, 방관자가 되었다.” 라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나카이는 간도가 중국영토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나카이의 인식은 “문관”을 간도에 파견하여 간도문제를 외교적 소재로 삼아서 간도영토를 중국영토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간도지방의 이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나카이는 통감부의 간도정책에 대해 “이토의 대간도 정책은 외교정책 중에서 가장 졸렬한 것이었다.” 라고 비난한 후, “이것은 처음부터 이토의 의견이 아니었던 것 같다. 모두 무관(주차군사령부)들이 바람을 날여서 간도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을 잃게 되고 간도를 취하면 복수전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토는 주차사령부에 의해 선동된 경향이 없지 않다.” 라는 것처럼, 간도정책은 일진회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조선주차사령부의 주장에 선동되어 통감 이토가 영토화 정책으로 추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제 통감부가 추진한 간도정책은 군부나 일본외무성, 통감부 등에서 논의된 간도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영토화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러시아의 간도 인식

1) 러시아의 간도 인식

러시아는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계기로 당시 건설 중이던 동청(東淸) 철도 보호 명목으로 만주를 점령한다. 1900년 7월 간도를 점령한 후 군정관을 주재시킨다. 러시아의 군정은 간도에서의 중국 세력을 약화 시키고 조선 세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군정 실시로 인해 간도 영유권 문제에 러시아가 개입하게 된다.

러시아에게 간도의 전략적인 가치는 없지 않았다. 간도 지역의 조·러 공동 통치안을 제안하면서 북간도 문제협치조약을 체결했다. 간도를 함경도 일부로 명기하여 조선 영토로 인정하였지만, 러시아의 추가 요구사항 등의 이유로 성립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이후, 조·중·러 3국 공동 통치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당시의 남하정책 추진

을 위해 열강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 때, 러시아는 열강으로부터 만주에서의 철수를 요구 받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간도 영유권이 중국보다 조선에 속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만약 간도가 중국의 영토였다면, 만주 철수시 간도에서도 철수를 했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 학자의 간도 주장

1902년 대한제국과 러시아가 간도(間島) 지역에 대한 공동 통치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러시아의 저명한 동방학자 H.B. 쾨네르(1877-1955)의 저서 '한국개관'에 따르면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1902년 간도 지역에 대한 공동 통치 특별 협약을 체결했다. 쾨네르는 1908년 편찬된 '간도문제'(間島問題)라는 책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파견된 자국의 공사 베베르를 통해 이 문제(간도 문제)에서 한국 정부를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간도 지역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공동 통치를 규정하는 특별 협약안이 1902년 이미 양국 정부 간에 작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간도문제'는 중국의 혁명가 쑹자오런(宋教仁, 1882-1913)의 저서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1902년 당시 대한제국과 간도 지역에 대한 공동 통치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간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수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청나라와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과 간도를 공동 통치하려 했다는 것은 한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한제국과 러시아가 간도 공동통치협약을 체결했다는 1902년은 대한제국이 이범윤을 간도시찰사로 파견하는 등 간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노력하던 시기였다. 쾨네르는 간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土門)'에 관한 조선과 청나라 간 해석 논쟁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명했다.

조선과 청은 1712년 백두산정계비를 세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西爲鴨綠 東爲土門)고 합의했으나, 이후 토문강이 어디인가를 두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측은 토문강이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조선은 송화강 지류라고 맞서왔다. 김 연구위원은 "쾨네르는 (토문강이 두만강인지 송화강 지류인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에 굉장히 유리하게 이 문제를 기술했다"면서 "한국과 중국 양쪽의 논리를 살펴본 결과 한국 측의 논리가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쾨네르에 따르면 1881년 무렵 함경도 관리가 간도 지역 토지 이용에 관한 서류를 발급했으며, 1880년 중반 이후 중국이 간도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이주민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1909년 일본의 간도파출소가 한 주민조사에 따르면 간도지역 한국 이주민의 수는 8만2천999명으로, 중국인 거주자(2만7천371명)의 세 배가 넘었다.

규네르는 레닌그라드대(현 상트 페테르부르크대학) 교수 등을 지낸 저명한 학자로,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조선의 경제적 변화상과 지리 정보를 집대성한 저서 '한국개관'을 1912년에 펴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근 '한국개관'을 발간 100년 만에 한국어로 번역 출간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개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연구논문 '한국개관에 나타난 한국 영토영해 및 사료적 근거'를 학술지 '사람'에 발표할 예정이다.

4. 대한민국의 활동

1) 간도를 바라보는 인식

2011년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간도에 대해 한국인의 46% 정도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간도'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한 상황이 현실이다.

우리가 간도에 대해 망각하고 있을 때,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간도는 물론 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넘보는 전 방위 공세로 치달고 있다. 중국은 일찍부터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영유권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것에 대비해 문제 지역에 대한 '영토 굳히기' 작업을 음으로 양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측에 역사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최대 강역주의'가 바로 그것으로, 이는 중국 영토가 역사상 최대로 확대되었던 1840년의 강역(疆域)을 중국 역사의 기술 대상으로 함을 말한다. 당시 영토는 중국 본토 외에 만주와 몽골, 신장, 티베트, 타이완 등을 포함하는데, 중국 측이 발해의 역사와 고구려사의 일부를 '중국 역사'로 해석하는 경향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또한 중국은 일찍이 1990년대 초반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국경 정비 작업을 서둘렀다. 1993년에는 중국 측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의 논리를 중국 측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라는 책을 펴낸바 있다. 이렇게 중국의 경우엔, '간도'는 '당연히' 중국의 땅이라는 생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중국적' 논란이 군대를 면제받기 위한 '특

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불과 70년 전 우리 민족이 살아가던 간도에서는 ‘특혜’가 아닌 ‘낙인’으로 작용했다. 일제 강점기 간도 거주민은 한국인이 10만 이상, 중국인이 2만, 일본인은 2000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과 일본 양국의 실리 싸움에 희생됐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주어진 일본국적과 중국의 회유책으로 주어진 중국국적 사이에서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나라 잃은 한국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쪽의 해석에 따라 중국인, 혹은 일본인으로 구분되어 만주사변(1931)의 빌미가 되거나 무차별 약탈의 대상이 되곤 했다. 하지만 과연 조상들의 이러한 수난과 희생을 기억하는 한국인의 수가 얼마나 될까? 저서 <간도 비극의 땅, 잊혀진 영토>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故) 심상용(1914 ~ 2013)은 “나는 간도를 당장 되찾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한다고 본다.”며 “통일 한국을 앞두고 간도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 ‘독도’의 경우에 이를테면 ‘발끈’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지만, 겨우 100여년 전에 빼앗겨 버린 ‘간도’에 대해서는 꾸준히 무관심과 무지가 남루 한다.

한편, ‘을사늑약’의 핑계로 중국에게 우리의 ‘간도’를 팔아 준 ‘일본’에서는 이런 조선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다 체포를 반목해서 당하고 심한 고문으로 인해 2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 마키무라 코(槇村浩; 1912-1937)가 있다. 글쓰이의 본명은 요시다 도요미치. 《프롤레타리아문학(1932)》 4월 호에 발표한 ‘간도 빨치산의 노래’에는 당시 겨우 19살의 일본 청년이 간도에서 투쟁을 하는 조선청년들의 마음을 노래하였다. 그의 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간도 빨치산의 노래 》

추억은 나를 고향으로 데려간다.
 백두의 고개를 넘고 낙엽송 숲을 넘어
 갈대뿌리 검게 얼어붙은 늪의 저편
 붉게 탄 땅거죽에 거뭇한 오두막들이 이어지는 곳
 고려평이 골짜기에 우는 함경의 마을이여
 ...

오, 3월 1일

민족의 피물결이 가슴을 울린다. 우리들 중 어느 하나가
 무한한 증오를 한 순간에 내던졌다. 우리들 중 어느 누가
 1919년 3월 1일을 잊을 수 있으랴!

그날

‘대한독립만세!’ 소리는 방방곡곡 뒤흔들고
짓밟힌 일장기 대신
모국의 깃발은 가가호호 펄럭였다.
가슴에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로 우리는 그날을 떠올린다

...

오, 피의 3월- 그날을 마지막으로
부모와 누이와 나는 영원히 이별했다.

...

구슬픈 고국이어! 네 위를 떠도는 시취(屍臭)가 너무도 애처롭다.
벌집처럼 총검에 찔리고, 산체로 화염 속에 던져진 남자들!
강간당하고, 갈기갈기 찢겨, 내장가지 터져나온 여자들!

...

하상(河床)에 얼음덩이 부서지는 이른 봄의 두만강을 건너
국경을 넘은 지 어느덧 13년
고통스런 투쟁과 시련의 시기를
나를 장백의 평원에서 지냈다.

...

바람이어, 울분의 메아리를 가득 담아 백두에서 휘몰아쳐오라!
파도여, 격분의 물보라를 일으키며 두만강으로 세차게 솟아올라라!
오, 일장기 펄럭이는 강도떼들!
부모와 누나와 동지들의 피를 대지에 쏟고
고국에서 나를 쫓아
지금 칼을 휘두르며 간도에 닥쳐오는 일본의 병비(兵匪)들!

2) 민간차원에서의 활동

①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 (<http://www.gando.or.kr>)

2007년 7월 24일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가 창립되었다. 간도 학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함이었다.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켜 이를 중국 정부에 천명함으로써, 우리의 간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상의 시효를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도다. 간도 신문을 발행하여 새로운 간도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간도 뉴스와 간도 영상을 통해서도 소식을 전하고 있다.



(<http://cafe.naver.com/cor eagando/2485> 간도영상)

② 한국간도학회

2004년 4월 12일 ‘한국간도학회’가 창립되었다. 간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소수민족 또는 동북 3성의 재중 동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 국제법·정치사·역사 등 여러 방면에서의 검토와 연구를 지속시켜야 한다. 간도 문제가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간도 지역이 우리 땅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주장하는데 학문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치계, 언론계, 그리고 학계차원에서 간도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함께 촉구할 때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늘의 현실을 무엇보다도 국회뿐만이 아니라 주관부처인 외교통상부에서 그 문제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앞으로 간도학회지를 통해 간도가 고토였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땅이었음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국민적 함의와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다짐한다.

③ 학생들의 플래시몹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역사연구동아리 학생들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규탄하는 역사왜곡 반대 플래시몹을 펼치고 있다. 이번 플래시몹은 안양외고 학생들이 시민들에게 중국의 동북공정을 알리고 한국 역사가 왜곡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와 교과부에 역사왜곡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④ 간도 되찾기 해피빈 이슈 모금

간도 되찾기 운동 본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한 후원모금 활동
(<http://happylog.naver.com/gando0904.do>)

우리단체 모금함 [더보기 >](#)

Gando
간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좀더 나은 세상 함께 만들어요

1. 북방민족과의 관계 나눔 및 이해증진 사업 2. 중국동포 생활기반구축 및 지원 사업 3. 북방민족과 한국인간에 민족 정체성회복 활동사업 4. 북방지역과 북방민족관련 국내외 학술자료 전시 및 연구개발 ...

8,632,000 원 11,388명 모금하였습니다. > 기부현황

간도 되찾기 운동
오늘은 일제와 청나라가 조선을 배제한 채 민주 일대를 중국영토로.
모금현황 : 5,017,800원

11,388명 참여 13,947회에 걸쳐 총 86,320개 * 100원 = 8,632,000원(2008년 11월6일 ~ 2013년 12월26일)

⑤ 설민석의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 영상

<https://youtu.be/CTKUPCSyCD4>

⑥ 간도노래

서희의 ‘간도 of Korea’

<http://cafe.daum.net/seoheefan/1uFy/9>

⑦ 2005년 9월 4일 간도의 날 선포



⑧ 간도 협약 무효 결의안지지 서명을 통해 잃어버린 땅 간도를 되찾으려고 함.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7633	간도 협약 무효	안경섭	15-01-19	67
7632	서명합니다.	천보삼	14-12-30	27
7631	간도는 우리땅!!!!!!!!!!!!!!!!!!!!!!	엄하영	14-12-29	36
7630	서명합니다. 국민들의 관심밖인 것 같...	김은영	14-10-31	55
7629	서명합니다.	경기태	14-07-15	63
7628	간도 협약 무효 지지합니다	김혜란	14-07-07	50
7627	서명합니다.	황연주	14-03-20	61
7626	간도는 우리땅입니다.	변광민	14-03-12	107
7625	간도는 우리땅 서명합니다.	만주 간도	14-03-08	44
	☞ RE 간도는 우리땅 서명합니다.	정덕영	14-06-15	73
7624	간도는 우리 땅	권혁수	14-02-11	77
7623	서명합니다.	박원희	14-02-05	43
7622	서명합니다.	강한솔	14-01-12	26
7621	서명합니다.	김익수	13-12-24	26
7620	서명합니다 !!	정승원	13-12-05	30

⑨ 간도 되찾기 1호 택시

